

● 축산정보(뉴스)

서울국유림 관리소, 무의도 산림복원

산림청 서울국유림 관리소는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무의도의 불법건축 및 경작물에 대한 단속을 한다. 서울 국유림 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 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산림의 훼손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무의도는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1일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섬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의 의견 조율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무단 점유지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한다.

〈목재신문〉

축산물등급판정소 청년 인턴 채용

임금동결 및 자체 예산절감으로 채용비용 확보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기악화와 고용부진에 따른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추어 청년인턴 10명을 채용했다.

축산분야 유일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필요한 비용은 기관 자체적으로 2009년도 임금의 동결과 경상경비 10%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했다.

근무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월 보수는 1,100천원으로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고 주 5일제로 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경영효율화 등으로 기관의 경영여건도 어렵지만 사회전반의 고용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정한 것이며 채용 후에는 각종 교육기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역량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 정정합니다.

양봉협회보 2월호 41p에 게재된 사진 설명 중 산림청장 성명을 정광수 산림청장으로 바로잡습니다.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농식품부, 세부 실천계획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24일 2012년 농식품 100억불 및 올해 53억불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식재료 수출을 앞으로 농식품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기본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식재료 수출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식품수출 패러다임의 다변화를 위해 종전의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1차 상품수출에서 산재된 식재료 수출 인프라를 연계해 6차 산업수출로 전환해 100억불 수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식재료 시장은 종전의 원료농림수산물을 세척·절단한 신선편의 식품과 이를 가공한 원료식품과 가공식품을 망라한 것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식재료 수출목

표를 올해 9천만불에서 2012년 35억불로 약 40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시장분석, 바이어초청 및 상담, 해외물류유통 등 업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인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등이 보유한 DB와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식재료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재료 생산·유통·수출 등에 대한 DB 및 해외업체와 연계된 기업 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식재료 수출의 원년의 해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해 확산시키는 한편 수출용 식재료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필요시 한식조리사도 선발해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대기업 축산업 진출 반드시 막아야

축단협, 최대 현안 과제로 강력 대응키로

축산업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생산자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월 27일 단체별 집행간부와 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최대 현안 과제로 축산업 대기업 진입 반대와 농협개혁 중 축산경제대표

이사 선출 특례조항 삭제 반대 등을 꼽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와 사료안정기금 조성, 축산자조금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축단협 3월 18일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주요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계와 학계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라이브뉴스>

농식품부 대국 대과체제로 개편

축산정책단 3개과로 축소 검토… 축산업계 경쟁력 지원 위축 우려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국(大局) 대과(大科) 체제로 조직을 개편키로 함에 따라 축산정책단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 조직을 대국 대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조직을 고칠 수 밖에 없다는 것. 행안부 지침은 1개국의 최소 인원을 45명 이상으로 하고, 1개과에는 최소한 15명으로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 시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여 위생 및 안전, 검역 등 소비자와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 축산정책단의 축산물위생팀이 맡고 있는 위생 및 안전업무와 동물방역팀이 맡고 있는 검역 업무를 소비

안전국으로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직을 짜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축산물위생팀이 해체 운명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순환팀의 경우 현 인원이 15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다른 과로 편입시킴으로써 대과 방침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물위생팀과 자원순환팀이 사실상 없어지게 돼 축산정책단의 현행 5개과가 3개과로 축소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획일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다양화된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MB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여서 되겠냐”며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조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산림청, 산주에게 16억원 지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국비 및 지방비를 합쳐 총 16억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여 산림경영기술자를 통한 전문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용을 산림청이 지원한다. <목재신문>